

르완다와 아이티 사태를 통해 본 유엔 개입의 모순과 문제점

최재훈*

I. 들어가며

1994년의 르완다와 2004년의 아이티. 사실 서로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한국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두 나라의 현대사에 눈길이 머물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초 부터였다. 당시는 필자가 활동하던 <전쟁과점령반대행동(Mobilization Against War and Occupation, 이하 MAWO)>이라는 캐나다의 반전운동 단체가 ‘미국과 유엔은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라(US/UN Hands Off Africa)!’는 캠페인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그 계기는 그 전 해인 2006년 12월 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에티오피아 군대의 소말리아 침공과 수단 다르푸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었다. MAWO는 근본적으로 두 사건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분쟁 해결과 인도주의의 깃발을 앞세우고 약소국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침략’의 또 다른 사례라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엔 다르푸르 평화유지군에 관해서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군사적 개입만이 대안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몰이를 통해 제국주의 개입과 침략을 포장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내전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 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현 경계를넘어 활동가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 예로, 작년 12월 한국 출신의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할 무렵 국내 언론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사
 와 사설들이 줄을 이었는데, 상당수가 유엔 평화유지활동(그 중에서도
 평화유지군)에 대한 한국의 미흡한 참여를 지적하고 위상에 걸맞게 평화
 유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더 많은 참여는 곧 더 큰 기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서구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비판적이었던 한국
 의 시민사회운동이나 반전평화운동도 반드시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
 어, 이라크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던
 <나눔문화>라는 단체에서는 지난 봄 ‘시간이 없다, 다르푸르를 구하자’
 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요지는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는 아프
 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의 신속한
 파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유엔뿐만 아니
 라 한국 정부에게도 이라크와 레바논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대신 다르푸
 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필자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애초부터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이라크는 논외로 하더라도, 왜 레바논 파병은 반대하
 면서 수단 다르푸르를 비롯한 그 외 지역으로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은 ‘촉구’하고 거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물론, 1978년 3
 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창설된 뒤 1982년의 대학살과 1994년,
 1996년, 1999년, 2000년, 2007년의 잇따른 이스라엘의 도발에 속수무책
 이었던 유엔 레바논 임시군의 무능력, 2006년 8월 11일 채택된 유엔 결
 의안 1701호에 따라 증파되는 유엔군은 침략국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
 함이 아니라 그에 저항했던 헤즈볼라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편파
 성 등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은 그 자체로 정당성도 없고 세계평
 화에 대한 기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당연히 레바논 파병
 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유엔이 레바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불편
 부당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갈등과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에의 참여는 곧

국제사회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생각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바로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1994년의 르완다와 2004년의 아이티였다. 전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혹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위기에서도 전혀 그 ‘인도주의’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사례로, 후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약소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데 있어 어떻게 유엔의 깃발을 잘못 휘둘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취지와 절차, 역사와 현황 등을 간략히 살펴본 뒤, 르완다와 아이티 사태의 배경과 경과, 유엔 및 국제사회의 개입과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II.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eace Keeping Operation, PKO)

1. 정의와 절차

유엔의 평화와 안보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즉 조정과 예방(Peacemaking and Preventive Action),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확립(Peacebuilding)으로 나뉜다. 이 중 실제 활동의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 바로 평화유지활동(PKO)이다.

평화유지활동(PKO)은 분쟁을 겪는 나라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돕는 방법의 일환으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경찰과 비정부기구 등 민간 영역까지도 참여시켜 분쟁 이후의 평화 절차를 감시하고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평화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자위적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파견한 무장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장해제, 치안유지,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유엔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 PKF)라고 한다.

그 절차와 기본원칙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의거해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주도 하의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화유지활동(PKO)은 유엔 관할 하의 군대를 통해 유엔 자체적으로 행해지지만, 직접적인 유엔의 개입이 적절치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보리 승인 하에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같은 지역기구들이나 혹은 그 외 “의지를 가진 나라들의 연합(coalition of willing countries)”이 특정 평화유지나 강제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기도 한다.¹⁾

2. 역사 및 현황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1948년 5월 19일 안보리 결의안 50호에 의거한 유엔 예루살렘 정전감시단(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1건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 2,405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948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47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은 17건으로(2007년 10월 기준) 119개 회원국에서 82,237명의 군경 및 군 감시단, 18,242명의 민간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²⁾ 참고로, 한국은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II)에 공병대대인 육군 상륙수부대를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7월 동명부대의 레바논 파병까지 총 12건에 약 5,500여 명을 참여시켰다.³⁾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역사에서 군대의 파병을 통한 평화유지,

1) <<http://www.un.org/Depts/dpko/dpko/faq/>>

2) <<http://www.un.org/Depts/dpko/dpko/bnote.htm>>

3) <http://www.mnd.go.kr/policyFocus/koreanSolider/peace/index1_2.jsp>

즉 평화유지군(PKF)의 개념이 탄생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의 이른바 ‘수에즈 위기(the Suez Crisis)’⁴⁾에서 부터이다. 당시 캐나다의 외교장관이었던 레스터 B. 피어슨(Lester B. Pearson)⁵⁾의 제안으로 창설된 유엔 긴급상항군(UN Emergency Force, UNEF)이 평화유지군(PKF) 최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UNEF가 설정한 비무장지대는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침공을 일으킨 국가인 이스라엘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오히려 공격을 당한 이집트의 영토에만 설정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11년 뒤인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데 무기력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즉, 유엔 평화유지군(PKF)은 그 출발부터 공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안은 채 시작되었던 것이다.

Ⅲ. 르완다 대학살과 국제사회의 방조

전쟁과 학살의 세기라 불리는 20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94년, 아프리카의 정중앙에 위치한 르완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종 청소가 벌어지게 된다. 다수파인 후투족의 공격으로 불과 백여 일 만에 소수파 투치족과 온건한 성향의 후투족 최소 8십만 명의 목숨이 잔혹하게 살해된 것이다. 당시 국제사회를 더욱 충격과 논란에 빠뜨렸던 것은 그 대량학살이 이미 르완다에 파병되어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유엔과 서구 강대국 정부들은 몇 달 전에 이미 대량학살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린다. 과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4)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이집트를 지지하고, 미국 또한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난하던 시점에서 이-영-프의 이집트 침공을 두둔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빠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자, 3개국 연합군은 점령지에서 결국 철수하게 된다.

5) 피어슨은 그 공로로 이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며, 이후 캐나다의 14대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는 왜 르완다 민중들의 죽음을 수수방관했는가? 유엔 평화유지군은 왜 르완다에서 분쟁과 학살을 막는데 실패했는가? 지금부터 그 역사적 배경과 르완다 대학살을 둘러싸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여준 위선과 자기모순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1. 역사적 배경

1) 식민주의와 인종분리 정책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르완다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벨기에로 통치권이 넘어간다. 벨기에 정부는 다른 식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르완다를 식민지배하는 과정에서 인종 간의 분리정책을 쓰게 된다. 1926년에 새로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여 인종 간의 구분을 공식화하였고, 인구의 15% 가량을 차지하던 소수와 투치족에게 교육과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몰아줌으로써 82%의 다수와 후투족을 통치하게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체제 하에서 투치족은 유럽식 교육을 받은 지배층으로 자리 잡은 반면, 후투족은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 계급을 구성하게 되었다.

르완다에서의 인종 간의 갈등과 폭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식민지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르완다 학살을 연구해온 스티븐 D. 래지(Stephen D. Wrage)같은 학자에 따르면, “후투와 투치 간의 폭력은 태곳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종종 관찰되지만, 벨기에의 문서들에 따르면……1960년 경 이전에는 인종적인 경계에 따른 폭력은 흔치 않았고, 1994년과 같은 식의 대량 살인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⁶⁾고 한다. 즉, 식민모국 벨기에가 원래부터 존재하던 인종갈등을 지배를 위해 단순히 이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종 간의 분리정책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이 점점 서로 간의 폭력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이다.

6) Wrage, Stephen D., *Genocide in Rwanda: Draft Case Study for Teaching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아무튼, 벨기에 정부의 차별 정책에 불만을 품은 후투족은 1959년 당시 아프리카 전역을 휩쓴 범아프리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수만 명의 투치족을 살해하고 15만 명을 인근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등으로 쫓아냄으로써 투치족을 권력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이는 뒤이어 벨기에의 식민통치까지 종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1962년 7월 1일 르완다는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동시에 후투 권력의 시대가 막이 오르게 된다.

2) 프랑스 대리정권의 탄생과 내전의 발발

비록 독립을 쟁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벨기에가 떠난 틈을 타 르완다를 아프리카에서의 저물어가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긴 프랑스가 후투 정권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주브날 하비야리마나(Juvenal Habyarimana)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잔혹한 철권통치를 휘두른 독재자였지만, 대외적으로는 권력 기반의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인근 국가로 뿔뿔이 흩어져 주로 난민 캠프에서 살아가던 투치족은 폴 카가메(Paul Kagame)의 지도 하에 1987년 우간다에서 르완다 애국전선(Rwandan Patriotic Front, RPF)을 결성하고, 1990년 10월 1일 르완다 북부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르완다 내전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자 대재앙의 서곡이 울린 것이다. 연일 르완다 애국전선이 승승장구하면서 수도인 키갈리의 목전까지 치고 오자, 프랑스는 1,100명의 프랑스 군과 무계만도 하루 약 20톤에 달하는 무기와 전쟁 물자를 보내면서 꼭두각시 후투 정권을 지원한다. 최정예 낙하산 부대가 포함된 프랑스 군은 르완다 정부군에 대한 훈련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포로로 잡힌 반군에 대한 심문과 치안 유지에까지 직접 관여하였으며, 비밀리에 전투에까지 참여하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아니라 사실상 르완다 애국전선과 프랑스 간의 대리전쟁이었던 셈인데,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가사나(James Gasana)는 르완다 군은 프랑스 군의 발사 허가를 받은 후에야 프랑스가 제공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한 프랑스 교관에 따르면, 프랑스 군이 와서 포를 설치하고 뒤로 물러서면 르완다 정부군이 와서 버튼을 누르는 식이었다고 한다.⁷⁾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심화될수록 전세는 후투족 정부에게 점점 불리하게 전개된다. 그러자, 1993년부터 후투 정부 내에서 ‘민간자위병력(Civil Self-defense forces)’의 창설과 그를 통한 인종청소가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한다. 2004년 3월 26일자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학살이 일어날 당시의 르완다 정부 총리였던 장 캄반다(Jean Kambanda)는 몇 년 후 열린 르완다 학살에 관한 국제전범재판에서 “내각의 한 장관은 개인적으로 투치족 모두를 제거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투치족이 없으면 르완다의 모든 문제들은 끝날 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직된 것이 바로 이듬 해 대규모 학살을 직접 자행한 그 악명 높은 ‘인테라함웨(Interahamwe)’와 ‘임푸자무감비(Impuzamugambi)’ 민병대였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자신이 조종하는 르완다 정부가 이 두 민병대 조직을 활용해 대량 인종청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들도 엄청난 참극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2. 학살의 발발, 그러나 방관하는 국제사회

1) 정전협정과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

1993년 8월 4일, 국제사회의 중재로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르완다 정부와 반군 사이에 일시적인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그리고 그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수도 키갈리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2,548명

7) Leave None to tell the Story: Genocide in Rwanda, Human Rights Watch, 1999년 3월.

8) Ex-Rwandan PM reveals genocide planning, BBC, 2004.3.26자.

규모의 평화유지군인 유엔 르완다 지원단(UNAMIR)의 파병이 결정된다. 해를 넘긴 1994년 1월 10일, UNAMIR의 부사령관이던 벨기에 출신의 룩 마샬(Luc Marchal) 장군은 후투족 민병대를 훈련시키던 고위급 정보원⁹⁾으로부터 투치족에 대한 인종청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그 정보원은 자신이 속한 민병대원 1,700여 명이 정부군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과 함께 학살에 쓰일 무기를 감춰둔 주요 무기고 네 곳의 위치를 알려주고, 심지어 마샬 장군을 그 중 한 곳에 데려가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었다. 마샬 장군은 이를 즉각 UNAMIR 최고 책임자인 로미오 델레어(Roméo Dallaire) 중장¹⁰⁾에게 보고했고, 델레어 중장은 그 다음날 뉴욕의 유엔 본부에 전보를 보내 그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유엔평화유지군이 무기고의 무기를 압수하기 위한 작전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엔 본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872호에 의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학살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엔이 취한 조치는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¹¹⁾

2) 지옥의 100일, 구세주는 없었다

1994년 4월 6일, 르완다 대통령 하비야리마나와 이웃 부룬디 대통령은 타리오미라(Ntaryomira)를 태운 비행기가 키갈리 상공에서 격추되어 두 사람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45분 뒤 수도 키갈리 시내 곳곳에는 민병대원들에 의해 바이케이드가 설치되기 시작하고 정부 소유의 RTLМ 라디오에서는 ‘투치 바퀴벌레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자극적인 선동방송이 흘러나왔다. 거리는 AK-47 소총

9) Jean Pierre라 알려진 이 정보원은 원래 대통령 경비대의 장교였다가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0) 델레어 중장은 2003년에 르완다에서의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유엔의 학살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 저서 ‘악마와 악수하다(Shake Hands with the Devil)’를 세상에 내놓았다.

11) 관련 자료: 미국 PBS 다큐멘터리 ‘악의 승리(the Triumph of Evil)’

과 원주민 칼을 든 후투족 민병대들과 그들을 피해 달아나는 투치족 주민들로 인해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연출되었다. 학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르완다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투치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거나 평소 후투족 강경파들의 눈 밖에 난 후투 온건파 주민들도 학살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러나 르완다 애국전선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학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뒤, 약 2천 여 명의 주민들이 벨기에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던 한 기술학교로 피신해왔지만, 유엔 사령부에서는 평화유지군만 공항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남겨진 주민들 모두는 학교 밖에 진을 치고 있던 민병대원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한창 학살의 불길이 타오르던 4월 20일, 유엔은 유엔평화유지군의 임무와 병력 수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912호를 통과시켜 그나마 주둔 중이던 2,548명의 평화유지군 규모를 270명으로 줄여 버린다.

이즈음에서 그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앞세워 다른 나라의 내정과 각종 분쟁에 개입해온 미국은 과연 그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유엔이 르완다 학살과 같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상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르완다 학살에 대한 개입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아 했다. 학살 당시 미 국방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였던 제임스 우즈(James Woods)는 미국 PBS 다큐멘터리 팀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읽고 있던 백악관, 국방부 관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무부건 국방부건 백악관이건 고위층들은 그 문제에 관여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다”¹²⁾고 증언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메릴랜드 주보다 더 작고, 매장된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경제의 90%를 차와 커피 수출에 의존하는 르완다에 만만치 않은

12)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evil/interviews/woods.html>>

비용과 자국 병사들의 안전을 걸고 굳이 개입할만한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바로 전 해인 1993년 같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퇴각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르완다 학살이 시작되기 불과 한 달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대통령령 25호에 서명한 터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르완다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뒤에도 후투 민병대의 인종청소가 대량학살(genocide)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오히려 노력을 집중했다. 대량학살로 규정될 경우 제네바 협정과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입장에서 더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 정부의 노력 덕분인지, 4월 30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대량학살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된다. 참고로, 이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의 객관적인 실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현재의 부시 정부가 발 빠르게 다르푸르 내전을 아랍계 민병대가 흑인 기독교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이자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압박한 것과는 아주 대비된다.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 대량학살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난 5월 17일이 되어서야 유엔 안보리는 아프리카 출신이 주축이 된 5,500명의 평화유지군 추가 병력 파병을 결정한다. 그러나 유엔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르완다 대학살의 주역인 후투족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장시키는 데 있어 배후지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는 프랑스로 하여금 남부 지역에서의 평화유지 역할을 맡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프랑스군은 오히려 학살 책임자들과 가담자들 상당수가 난민들 틈에 끼어 이웃 나라인 자이르(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로 피신하게끔 용인하였고, 그로 인해 그 곳에서 후투 민병대들은 난민촌에 있던 투치족들을 추가로 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콩고 내전이라는 또 다른 재앙의 불씨가 된다.

여하튼, 같은 해 7월 중순 르완다 애국전선이 키갈리를 접수함으로써 약 백일간의 피의 사육제는 겨우 끝이 나게 된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최

소한 8십만 명에서 백만 명의 목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3)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선과 무능

1994년의 르완다 대학살을 둘러싼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실패는 유엔의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의 핵심에 있는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가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의 결여, 의도적인 정보 묵살을 통한 책임의 방기,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 민간인 보호보다는 외국인 철수에만 집중했던 ‘비인도주의적인’ 활동의 방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1999년의 유엔 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르완다가 제3국들에게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로 인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고, “국제 사회가 다른 곳에서 취했던 조치에 비교해 볼 때 대재앙의 위협에 처한 (르완다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¹³⁾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르완다 대학살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날의 실패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야기했던 강대국의 이해관계 유무로 인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은 이제 과거 한 때의 잘못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과도한 “정치적 의지”로 인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왜곡되고 오용된 사례를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IV. 아이티, 외세에 의해 배반당한 민주주의

아이티는 세계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노예 혁명을 성공시킨 흑인 공화국이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미국 다음으로 독립을 쟁취한(1804

13) <<http://www.africaaction.org/docs99/rwan9912.htm>>

년) 아이티 민중들의 투쟁은 당시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로 대표되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 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체 인구의 8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며, 노동인구 3백 6십만 명 중 약 3분의 2가량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200여 년 역사에서 무려 33번이나 쿠데타로 정권이 뒤바뀌는 정치 불안이 꼽히는데, 그 정치 불안의 배후에는 바로 외세의 부당한 개입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이티의 역사와 함께 21세기에 접어들어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이티의 대통령이 외세의 배후조종과 지지를 받은 쿠데타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1) 식민화 과정에서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1492년~1804년)

아이티는 카리브 해의 히스파놀라(Hispaniola)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섬의 동쪽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이끄는 스페인 원정대에 의해 식민화된 이 섬에는 원래 타이노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았으나,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노예화 과정에서 대부분 살해되거나 전염병으로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고, 그 빈자리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 채워졌다. 1520년대 인근 멕시코 등지에서 금과 은이 대량으로 발견되자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의 히스파놀라 섬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시들해졌고, 대신 1625년부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여 1697년에는 생-도밍그(Saint-Domingue)라는 이름의 프랑스령이 된다.

프랑스인들은 그 곳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한 설탕과 커피 재배로 많은 이윤을 거둬들여 생-도밍그는 서반구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약 3만여 명의 유럽계 백인들이 그 비슷한 수의 흑백혼혈인 물라토를 이용해 5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잔인하고 혹독하게 착취하자, 오늘날 아이티의 국부로 존경받는 투상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의 지도하에 흑인 노예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게 되고, 투상이 이끄는 흑인 군대는 프랑스 군대와 손잡고 스페인과 영국군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다시 흑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본토에서 군대를 증파하여 투상을 살해하자, 그의 뒤를 이어받은 장-자끄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이 이끄는 군대가 캅 아이티앵(Cap-Haitien)에서 프랑스 군대를 궤멸시킴으로써 1804년 1월 1일, 아이티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2) 미국의 침공과 점령기(1915년~1934년)

그러나 독립 직후부터 신생국 아이티 앞에 놓인 길은 그야말로 혼란과 고립, 분노, 유혈로 점철된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국내적으로는 1806년 데살린이 암살된 후부터 수시로 대통령이 바뀌는 극도의 정정불안애 시달렸고,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했다. 식민모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카리브 해와 라틴 아메리카에 노예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들을 보유하고 있던 스페인과 아이티에서 불과 75마일 떨어진 자메이카에 아이티의 독립이 미칠 영향을 우려한 영국 등 거의 모든 서구 열강들이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티칸의 교황청까지도 가톨릭 사제들을 완전히 철수시킬 정도였다. 특히, 아이티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면서도 상당수가 노예농장 소유주였던 미국의 지배계급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은 아이티의 독립군을 공공연히 ‘식인종(cannibals)’이라 불렀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로버트 V. 헤인(Robert V. Hayne) 같은 이는 “아이티에 관한 우리(미국)의 정책은 명백하다. 바로 절대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들에게 있어 아이티의 독립 인정은 미국 남부 경제의 근간인 노예제를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¹⁴⁾

14) Clark, Lamsey 외, *Haiti: A Slave Revolution – 200 years after 1804*, International Action Center.

한편, 그 와중에 아이티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내부 권력투쟁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신흥제국인 독일이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쪽은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아직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국의 바로 턱밑이라 할 수 있는 아이티가 독일의 카리브 해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다가 1914년에 건설된 파나마 운하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15년 7월 28일 미국은 해병대를 동원해 전격적으로 아이티를 침공하게 되고, 그 뒤 1934년 철수할 때까지 19년간을 점령통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헌법에서부터 정치, 사회,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미국식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샤를마뉴 페랄뜨(Charlemagne Peralte)가 이끄는 무장 게릴라 투쟁으로 대표되는 아이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점령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잇따른 데다 결정적으로 1929년 들이닥친 대공황의 여파로 막대한 군사개입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미국 정부는 1934년 아이티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게 된다.

3) 듀발리에(Duvalier) 부자의 장기독재와 몰락¹⁵⁾(1957년~1986년)

미군이 떠난 뒤에도 쿠데타와 정정불안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인 혼란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실시된 1957년의 최초의 보편적 일반선거에서 프랑수아 듀발리에(François Duvalier)가 권력을 잡게 된다. 원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파파 독(Papa Doc)’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1964년 스스로를 종신 대통령으로 선포하지만 1971년에 질병으로 사망하고, 그를 대신해 당시 19살의 ‘베이비 독(Baby Doc)’ 장-클로드 듀발리에(Jean-Claude Duvalier)가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 1986년까지 아이티를 통치하였다. 듀발리에 부자는 집권 기간 동안 ‘통통 마쿠트(Tonton Macoutes)’라는 친위보안조직을 통해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살해한 철권통치로 국제사

15) <<http://en.wikipedia.org/wiki/Duvalier>> 참조.

회에서 악명이 높았다. 결국 대규모 민중봉기로 인해 몰락한 독재자 듀발리에 부자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우간다의 이디아민 등과 함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다.

4) 민선 대통령 아리스티드의 등장과 두 번의 쿠데타(1991~2004)

듀발리에 독재가 종식된 뒤 치러진 1987년의 선거 역시 폭력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아이티는 1990년 다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른다. 이 때 아이티의 오랜 혼란을 종식시켜줄 희망으로 떠오른 이가 바로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였다. 아이티의 빈민가 포르-살루(Port-Salut)에서 태어난 아리스티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지에서 공부한 뒤 사제서품을 받고 아이티로 돌아온 가톨릭 신부였다. 일찌감치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는 빈민가에서 ‘작은 신부(Little Priest)’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는 한편, 독재정권에 맞서 급진적인 가톨릭 신앙운동을 펼치며 빈민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 대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라발라스 운동(Fanmi Lavalas, 라발라스는 크레올 어로 ‘거센 물줄기’라는 뜻)’을 대표해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67.5%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써 그는 공식적인 선거에 의해 뽑힌 두 번째 대통령이자,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아이티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취임선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1991년 9월 30일, 라울 세드라스(Raoul Cédras)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그는 첫 번째 국외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대부분이 듀발리에 독재정권 시절 잔혹한 인권탄압을 저지른 주역들이었던 군부정권은 또다시 납치, 고문, 살해와 같은 방식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아리스티드 지지자들과 빈민들을 탄압하는데, 3년 여 동안 약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작은 보트에 의지한 채 정치 없이 카리브 해의 바다를 건너야 했다.

한편, 아리스티드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상당수가 해외원조에 기대어 살아가면서도 쿠데타 세력의 축출을 위해 스스로 해외원조 중단을 요청할 정도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화답한 유엔은 1993년 10월 아이티에 대한 석유 및 무기 금수조치와 쿠데타 주동자들의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로 군부를 압박한다. 그리고 1994년 8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 940호¹⁶⁾에 근거해 30개 국 약 2만 2천여 명의 다국적군이 아이티를 공격하여 쿠데타 세력을 축출하고 아리스티드를 복귀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과 그 중에서도 다국적군을 주도한 미국이 군부 쿠데타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셈인데, 그러나 당시 쿠데타 세력 내에서 온갖 잔학행위를 일삼았던 “아이티 진진진보전선(Front for the Advancement and Progress in Haiti, FRAPH)”이 사실상 미국의 CIA와 국방성 산하의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사주와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이 한 편에서는 아이티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아리스티드의 좌파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것인데, 분량 관계상 이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다.¹⁷⁾

아리스티드는 복귀 후 남은 임기를 채운 후,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는 아이티헌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 1996년 그의 오랜 동지였던 당선자 르네 프레발(René Préval)에게 정권을 물려주었다. 이는 역시나 아이티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 11월에 실시된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91.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16)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94/312/22/PDF/N9431222.pdf?OpenElement>>

17) 관련자료: McGowan, Lisa A., U.S. Policy in Haiti, 1997.

<http://www.fpif.org/briefs/vol2/v2n3hai_body.html>

Arrove, Anthony, An Interview with Allan Nairn, 1995.

<<http://www.zmag.org/zmag/articles/june95arnove.htm>>

CIA Linked to FRAPH, coup / 1994.

<<http://www.greenleft.org.au/1994/165/8541>>

되어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과거 군부 출신들과 엘리트, 그리고 기업 소유주들로 구성된 야당과 반대파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2001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정부도 그런 주장에 적극 동조해 아이티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 5억 달러 규모의 경제원조와 차관 제공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이티에게 이러한 조치는 크나큰 압력으로 다가왔고, 국민들은 엄청난 생필품 부족과 경제난에 고통 받아야 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기 필리페(Guy Philippe) 캅-아이티엔(Cap-Haitien) 전 경찰서장이 이끄는 반군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를 향해 진격해 오는 와중에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임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 당시 미국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서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 측에 자진 사임과 망명을 요청해 미국 정부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자진 사임이 아닌 미국 정부에 의한 강제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의 문제점

그동안 반군 세력의 쿠데타를 막아달라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을 사실상 외면해온 국제사회는 그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놀라울 만치 신속하고 기민함을 보여준다.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 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만장일치로 아이티의 치안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을 결의했으며, 바로 다음 날 미국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 해병대 선발대 150명과 프랑스 군 선발대가 아이티에 배치되었고, 뒤이어 캐나다와 브라질, 칠레도 다국적군에 합류한다. 이 다국적군은 그 해 6월 유엔 평화유지군인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으로 대체되게 되며, MINUSTAH의 감독 하에 대법원장이던 보니파스 알렉상드르(Boniface Alexandre)를 임시대통령으로, 제라르드 라토르튀

(Gerard Latortue)를 총리로 하는 임시과도정부가 설치되고, 이 임시과도 정부는 역시 MINUSTAH 관할 하에 치러진 2006년 2월 대선에서 승리한 르네 프레발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해놓고 보면,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분쟁의 해결사이자 조정자라는 평화유지군의 원래의 취지에 들어맞는 성공적인 임무수행의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군사 반란과 대통령의 사임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에서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키고 무사히 민정 이양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커다란 괴리가 있다.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은 파병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오고 있다. 그러면 그 비판의 주된 근거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1)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미국과 유엔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항 세력의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임하고, 그로 인한 치안과 권력의 공백상태를 국제사회가 평화유지군의 파병으로 잘 수습한 다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양했다면 국제사회의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이 과연 스스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는 엄연히 아이티의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리스티드와 그 측근들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이 미국정부 요원들의 강요에 의해 더 큰 유혈참극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임서에 서명한 후, 그들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망명지로 보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가 자진 사임했다는 2월 29일의 바로 전날까지도 그가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반군 세력을 제외한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여겨진다. 물론 미국 정부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미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를 비롯해 많은 관련된 이들과 노

엄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학자들, 인권단체들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아리스티드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⁸⁾

그렇다면,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만약 유엔 평화유지군의 취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아이티 국민들의 자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외세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던 비정상적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 즉 대통령의 조속한 귀국을 도움으로써 그가 무사히 남은 임기를 마치고 1996년에 그랬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혼란과 폭력을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유엔 평화유지군은 파병당시부터 아리스티드의 축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아리스티드의 귀국 자체를 지금까지 막고 있다. 불법적인 쿠데타를 용인해준 셈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제프리 D. 삭스(Jeffrey D. Sachs)¹⁹⁾ 미 컬럼비아대학 교수 같은 이도 2004년 3월 1일자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다.

아이티의 위기는 언론인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 미국이 행한 뻔뻔스러운 조작 사례의 하나이다. ……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아이티인들의 민주주의의 희망을 배신함으로써 과거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 그 결과, 그는 미국과 프랑스의 강요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대단히 왜곡된 견해이다. 부시의 외교정책

18) 참고자료(Noam Chomsky 외), *Getting Haiti Right This Time*, 2004년.

19) 제프리 D. 삭스 교수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자문역을 담당해온 경제학자이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이었으며, 현재에도 반기문 신임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팀은 제시 헬름스 전 상원의원 같은 미국 보수권력집단들이 그가 카리브 해의 또 다른 피델 카스트로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비방해온 아리스티드를 무너뜨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중략) 유엔은 어제의 사태가 불법적인 권력강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리스티드가 남은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일을 도와야만 한다. 둘째로, 미국은 대부분 미국의 작품인 반대파들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로, 글자 그대로 아이티 국민들을 굶어죽을 처리로 내몬 지난 몇 년 간의 500만 달러의 원조 동결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예상되는 대학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정리하자면,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좌파적 성향과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부는 아이티에 혹독한 경제제재 조치와 더불어 반 아리스티드 세력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해 쿠데타를 사실상 사주하였다. 그리고 아리스티드 축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이티의 권력 구조를 새로 재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활용하였던 것이다.²¹⁾ 이는 분쟁을 겪는 나라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돕는다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분쟁당사국(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다는 동의성, 분쟁당사국(자)의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중립성, 특정 참여국이 파견 중 해당 정부의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치안과 인권상황 개선의 구조적 실패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 중 하나는 질서와

20) Sachs, Jeffrey, *Don't fall for Washington's spin on Haiti*, 2004.
<<http://www.earth.columbia.edu/about/director/pubs/FT030104.pdf>>

21) 참고자료; Fenton, Andrew, *Fighting for Justice & Democracy in Haiti*, Counterpunch, 2004년 8월 7일.
Bundock, Shannon, *Haiti: Restoring Democracy Imperialist Style*, Fire This Time.

치안을 회복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력하는 활동이 아이티 국립경찰(Haitian National Police, HNP)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아리스티드의 축출 이후 유엔에 의해 임명된 임시과도정부의 사실상 실세였던 라토르튀 총리는 약 8백 여 명의 전직군인들을 경찰로 끌어들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듀발리에 독재정권 하에서, 혹은 1991년 쿠데타나 2004년 쿠데타에 가담했던 이들이다. 즉, 그동안 아이티 현대사를 학살과 고문, 납치 등의 인권유린으로 얼룩지게 했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인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대한 죄과를 치르기는커녕 이제는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권한을 이용해 아리스티드가 이끌던 Fanmi Lavalas 멤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 대부분이 아리스티드의 복귀를 요구하며 대중적인 집회와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시떼 솔레일(Cite Soleil)과 벨 아(Bel Air) 같은 빈민촌 주민들을 상대로 살인, 강간 같은 무차별 보복 테러행위를 저지르거나, 적어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우파 갱단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아이티 주민들 내에서 유엔 아이티 평화유지군을 ‘점령군(occupation forces)’이라 부르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²²⁾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축출과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 이후 아이티의 치안과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단지 아리스티드 지지자거나 미국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진영만의 정치선전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공개된 학계의 연구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미국 마이애미대학 법대 어윈 P. 스토크스(Irwin P. Stotsky) 교수 팀의 ‘아이티 인권조사(Haiti Human Rights Investigation : November 11-21 2004)’와 하버드 법대 인권프로그램 팀의 2005년 보고서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유엔안정화지원단 평가(Keeping the Peace in Haiti?: An Assessment of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의학학술

22) Ell, Darren, *Sovereignty and Justice in Haiti*,

<http://www.haitiaction.net/News/HIP/2_18_7/2_18_7.html>

지 랜싯(the Lancet)에 게재된 미 웨인주립대학교의 ‘아이티 포르-투-프랭스에서의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들: 무작위 세대조사(Human Rights Abuse and Other Criminal Violations in Port-au-Prince Haiti: A Random Survey of Household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랜싯에 실린 조사논문을 잠깐 들여다보면, 먼저 조사팀은 수도 포르-투-프랭스 지역에 사는 1,260 세대를 인터뷰한 결과 아리스티드 정권이 무너진 후 22개월 동안 포르-투-프랭스에서만 8천 명 가량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47.7%가 임시정부나 반아리스티드 군인들에 의해, 21.7%는 국립경찰에 의해, 13%는 제대 군인들, 그리고 다른 13%는 반아리스티드 갱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저질러져 약 3만 5천여 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18살 이하의 어린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3)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직접적 살인과 인권침해

아이티의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향하는 비판들 가운데는 바로 그들에 의한 직접적인 살인과 인권침해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7월 6일과 2006년 12월 22일 사건들로 모두 빈민촌인 시떼 솔레일(Cite Soleil)에서 일어났으며, 그 양상 또한 동일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과 기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따르면, 유엔군은 불법 갱단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들어와 주요 도로를 차단한 다음 가택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최루탄과 함께 총을 난사했다는 것이다. 2005년 7월 6일 학살 사건 바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들어가 주민들의 증언과 증거를 채취했던 미국 노동/인권대표단들은 약 3백 여 명의 유엔군이 참여한 그 날 작전에서 최소한 23명, 일부 보도에서는 50명 이상이 유엔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²³⁾ 또한, 2006년 12월 22일 학살 사건에서도 역시 어린이들과 여성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사망

23) <http://www.iacenter.org/Haitifiles/haiti_july805.htm>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유엔 측은 사망자들은 무장한 폭도들이었다며 민간인 살해를 부인하고 있다.²⁴⁾ 하지만, 주민들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들이 아직까지도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자 보복이라며 유엔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6년 12월 영국의 BBC 방송은 아이티에서 유엔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는데, 어느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강간당한 16살짜리 아이티 소녀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처음엔 못 알아보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있다.²⁵⁾

V. 글을 마치며

이제 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왜 유독 이 글에서 르완다와 아이티의 사례를 끄집어냈는지에 대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이들은 특히 르완다의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겠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렇다면 르완다와 반대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했다는 아이티의 사례는 어떤가? 과연 오늘날의 아이티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가?

만약 오늘날의 세계질서가 정의와 인도주의 같은 원칙보다는 불행히도 강대국들에 의한 힘과 국익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현실 진단이 틀리지 않다면, 그리고 유엔 역시나 그런 불공정한 현실에서 자유

24) UN in Haiti accused of second massacre, Haitian Information Project, 2007년 2월,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55&ItemID=12013>>

25) 이는 비단 아이티 평화유지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6년 9월 2일자 랜싯 기사에 따르면, 2004년 이래 17명의 평화유지군이 성적 착취로 해고되었고 혐의를 받은 313건의 가해군인 가운데 161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는데,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고 한다.

톱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그 중에서도 군대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시자이자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할 거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똑같이 분쟁과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나라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나서서 내정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또 어떤 나라에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있건 말건 수수방관하는 차이는 과연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몇몇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유무가 아닐까?

물론 르완다와 아이티의 사례는 전체 61건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중 극히 일부분으로, 그 둘을 가지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자체의 유의미성이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비약과 과장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각종 분쟁과 기아, 독재, 재난 등으로 인한 약소국 민중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점과 방식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서부터 그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하는가, 심지어 도움 받는 이의 자존심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들까지 말이다. 개인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 대상이 우리가 역사와 문화, 사회구조를 잘 이해하기 힘든 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수의 집단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3세계 분쟁의 해결사는 유엔 평화유지군, 그래서 더 많은 평화유지군 파병은 더 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분쟁 개입의 지난 역사와 현재에 대해 냉정히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약소국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인도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르완다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3세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쿠데타,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들의 배경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작용하고 있다. 진정 우리가 그들의 인권, 평화, 정의를 위한다면, 먼저 강대국들이 정략적 이해와 야욕을 버리고 그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각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사적 개입의 방식이 아닌 대안적인 분쟁 해결과 평화정착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